

전남 시·군, 42억 어치 적조 방제용 생황토 버릴 판

해수부서 분말황토 사용 추가 고시로 주요 피해지역 500t 생산업체에 의뢰 8개 시군 비축 12만t '골칫거리' 전락

정부와 전남도의 갑작스런 적조 방제 대책이 시·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군은 당장, 지금껏 적조 예방을 위해 써왔던 '생(生)황토' 대신, 분말 황토를 사용키로 결정되면서 곳곳에 쌓아놓은 42억원 상당의 생황토를 처리할 길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때 적조 예방을 위한 '호자' 노릇을 했던 생황토가 졸지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이다

21일 남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경우 7월 말부터 일조량 증가로 해수 온도가 21~26℃까지 상승, 유해성 적조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해수산연구소의 전망을 토대로 정부와 전남도는 분말황토를 적조 발생시 살포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의 경우 박준영 전 도지사가 바다 생태계 피해를 우려, 황토 살포를 자제하도록 지시하면서 지난해 생황토 대신 전해수

살포·수류 방제 등을 추진해왔다. 전남도는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수산연구소의 '분말황토 살포에 따른 효과가 자연황토보다 좋다'는 언급에 주목, 생황토에 비해 단가가 5배나 비싼 분말황토를 대안으로 결정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도 지난 4월 기존 생황토 입자의 36% 크기인 분말황토를 적조구제물질로 추가 고시했었다. 여수·완도·고흥 등 주요 적조 피해 예상지역의 경우 이에따라 적조 발생 시 사용할 분말황토 500t(20일분)을 구입, 비축할 예정이다. 분말황토 500t 가격은 8000만원(1t당 16만원) 정도다. 여수시도 이미 확보한 분말황토 37t 외에 추가로 250여t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 이후 전남지역 8개 시·군이 적조 예방용으로 쌓아놓은 11만 9000t의 생황토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비축 황토 중에는 1996년부터 보관된 것도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많은 양의 황토가 효용을 잃거나 빗물과 중금속 성분 등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황토 살포가 적조 예방에 탁월하다고 해왔다는 점, 42억 4000만원(국비·시군비 각 21억 2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점과 수천만원이 넘는 보관 비용 등을 감안하면 '급조한' 적조 대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재 여수시는 가두리양식장 인근 시 소 유 약적장 6곳에 3만 7987t을 비축해 놓은

상태며 매년 덮개를 교체하는데 1980여만 원이 든다. 완도군은 현재 생황토를 9곳에 3만 7000여t(시가 20억원 상당) 비축해놓고 있으며 고흥군은 4개 해역에 생황토 2만 6000t을 비축해놓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전남도도 "쓸만한 생황토를 녹조 방제나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등 이용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면서도 뾰족한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수십억을 들여 쌓아놓은 생황토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으로, 정부와 전남도 말만 믿고 따랐던 시·군만 예산 낭비를 하게 된 셈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장성 요양병원 화재 재판 이사장 등 6명 혐의 부인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이하 효사랑병원) 방화 참사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병원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참사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에서 열린 병원 대표 이사장(53)씨 등 병원 관계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하게 많은 희생이 발생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야간 인력 배치, 샌드위치 패널 설치, 비상구 폐쇄 미 소화기 비치 부적절함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반면, 이러한 의무 위반 행위가 환자들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씨를 포함한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56), 관리과장 등 관리 책임으로 기소된 3명 모두 같은 취지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했다. 다만,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부원장과 간호사 2명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사건 쟁점을 파악·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절차에 따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로, 검찰은 공소 사실 중 의무 위반 행위 등 세부 내용을 재판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방청객들에게 우왕좌왕하는 식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5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다음 달 12일 현장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잠자고 신문 보고 동영상 시청하고 ... 이러니 세월호 '골든타임' 놓쳤지

광주지검, 진도 VTS 직원 13명 전원 기소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 전원이 기소됐다. 경찰 공무원임에도,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월호 침몰 당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허비했을 뿐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에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은근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파렴치함'을 서슴치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참담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 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 2부장)은 21일 진도 VTS 센터장 김모(44) 경감 등 13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해경 소속인 진도 VTS 직원 모두가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인사 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진도VTS 전 관제사 4명의 비위 행위도 적발, 해당 기관에 징계를 의뢰했다. 이들은 직원 2명이 구역을 절반으로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1명만 근무해왔을 뿐 아니라, 서해해경정의 관제 소홀에 따른 경고 뒤에도 개선은 커녕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 뿐 아니라 주말 주간'에도 관제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그나마 1명의 근무자조차 신문이나 동영상 시청, 관제석에 앉드려 잠까지 자는 등 부실 근무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 "재대로 관제 업무를 했다면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하지만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에도 부실한 관제로 소중히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허비했고 사고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겠다고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는가 하면, 보관 중인 CCTV 기록·자료까지 삭제하는 등 위법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검이 21일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지난 2월 6일부터 1주일간 진도 VTS 관제실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데도 1명은 아예 자리를 비우는가 하면, 혼자 남은 관제사조차 관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신문을 보거나 아예 드러누워 숙면을 취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있다. <광주지검 제공>

유병언 6개월 유효 구속영장 재발부 대검, 세월호 중간 수사결과... 139명 구속

검찰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모두 331명을 적발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사고 이후 ▲세월호 침몰 원인고 승객구조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관리·감독상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선주

회사 실소유주 일가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모두 331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세월호 침몰 사고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선장·선원, 선주회사 임직원·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은 121명(입건)으로 6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또 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비리, 선박 도입비리, 항만 인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 210명을 입건하는 한편, 7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밖에 세월호 실소유주로 파악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

진해운 회장) 일가 4명과 측근 9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과 기독교복음집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054억원 규모에 대해 4회에 걸쳐 동결 조치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씨와 청해진해운 임

직원 재산 648억원 규모를 가압류했다. 검찰은 현재 도과 중인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유효 기간 6개월의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만큼 유병언 일가 소재 추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해경의 초동 조치·인명구조상 문제점, 구난업체 언딘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송정역에 폭발물 설치" 허위 소동

○... "광주 송정역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내가 직접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8시 14분께 119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 38명을 포함 63명이 송정역 주차장에 출동,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한 뒤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이렇다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재빨리 허위 신고범 검거에 착수했다는 것. ○... 통신수사 기법을 통해 재빨리 허위 신고 용의자 조모(37)씨를 붙잡은 경찰은 "조씨가 정신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허위신고도 상습 전력이 없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만 하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빌라 매매"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번지
- 2003년식, 30평, 3층, 방3, 화2
- 정남향, 전체 울수리
- 광주에서 30분 거리
- 매매 - 9000만원(조정 가)

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13층, 53평(실33평), 전체 울수리
- 양동~하천 방향, 코너, 전망 좋음
- 사무실 적합(주거 가능)
- 시세/분양가 - 2억원 정도
- 급매: 1억 5500만원(일시불 조정 가)

투자 가치 좋습니다
H. 010 - 3605 - 5000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주회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합니다